

사회지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the
Economic Sustainability*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회지출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지출의 증가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의 대표적 형식이 공짜점심에 관한 내용이다. 즉 직관적으로 세금에 근거한 사회이전을 증가시키면 삶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GDP는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공짜점심의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사회지출의 종류에 따라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등 가족과 고용복지에 관련된 사회지출은 비록 전체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부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 국제비교에서 전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낮지만 그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래에도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한 지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소득증대로 인한 복지욕구의 다양화 등의 증대요인과 함께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에 따른 자연적 지출의 증가도 상당한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어 과도한 복지지출의 증대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복지지출을 늘리되 과도한 복지지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가 복지지출이 최소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방해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 지출이 경제발전과 긍정적 관계를 가지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라 생각된다. 즉 복지지출이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최소한 상치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긍정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공짜 점심 (free-lunch)은 없다’는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¹⁾ 즉 통상 직관적으로 세금에 근거한 사회이전을 증가시키면 삶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GDP는 감소시킬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대와 상치되는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²⁾ 이러한 ‘공짜 점심의 역설’ (the free-lunch puzzle)에 대한 설명으로 Lindert(2004)에는 가능한 다섯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사회지출 중 그 지출을 위한 세금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Lindert, 2004, 227-228) 그리고 그 예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육과 양육모에 대한 커리어 투자,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재훈련, 그리고 은퇴연기에 지출된 사회지출이 언급되고 있다.(Lindert, 2004, 253-262, 281-291)

OECD SOCX 자료는 그 지출분야를 9개 영역으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생산적 복지에 해당하는, 즉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양립하는 사회지출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OECD SOCX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OECD SOCX 자료의 연구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지출의 변화 경향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주는 시사점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증가에 따른 사회지출의 변동에 어떤 규칙성을 찾아 볼 수 있는가이다.³⁾ 이는 특히 위에서 언급한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고부담-고복지 국가인 북구형이나 대륙형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고부담-고복지에 따른 문제없이 가능한 사회지출의 유형을 찾아보는 의미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OECD 국가들을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하여 OECD SOCX의 9개 지출영역에 걸쳐 소득 1만 8천불대와 3만불대의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구조변화를 살펴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소득증대에 따라 OECD SOCX 사회정책 분야 9개로 나타내어지는 보건복지분야 지출의 구조변동은 이들 분야에서 지출과 비중이 소득증가에 따라 어떻게 증감했는가를 보고 판단한다. 이때 구조변동을 관찰하는 관점으로서 OECD 평균은 전체적 경향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북구형과 대륙형은 고부담-고복지로 해석하고, 영미형은 저부담-저복지로 해석한다.

먼저 OECD평균의 전체적 경향을 보면 가족, 노령, 보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주거, 근로무

1) Peter H. Lindert, 2004, Growing Public: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27-263.

2) 물론 공짜점식의 논리에 들어맞는 예도 있음.

3) 통계적인 유의성에 관한 척도가 결여되어 있으나 일단은 소득이 통제된 상황에서 상관관계의 방향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음.

4) 1만 8천불과 3만불의 소득수준은 당시 연구에서 당시 한국소득(2006)과 다음으로 목표가 될 수 있는 소득수준을 선정한 것임(유근춘 외(2008).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 소득증대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구조변동의 경향성

구분	OECD 평균	복구형	대륙형	영미형
증가	가족, 노령, 보건	실업,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주거, 기타	노령, 보건, 가족,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타	보건, 가족, 노령,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악한 증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주거,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기타		주거	주거, 기타
감소	유족, 실업	보건,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족

출처: 유근춘 외(2008).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0의 <표 5-1>.

표 2. 소득증대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구조의 변화

구분	소득수준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	주거	기타	합
OECD 평균	3만불(A)	6.78 (30.13%)	0.56 (2.49%)	2.58 (11.47%)	6.00 (26.67%)	2.38 (10.58%)	0.76 (3.38%)	1.28 (5.69%)	0.38 (1.69%)	0.47 (2.09%)	22.50 (100.00%)
	1만8천불(B)	6.18 (29.71%)	0.99 (4.76%)	2.57 (12.36%)	5.53 (26.59%)	1.74 (8.37%)	0.74 (3.56%)	1.43 (6.88%)	0.36 (1.73%)	0.49 (2.36%)	20.80 (100.00%)
	A-B	0.59 (34.71%)	-0.43 (-25.29%)	0.01 (0.59%)	0.47 (27.65%)	0.64 (37.65%)	0.02 (1.18%)	-0.15 (-8.82%)	0.02 (1.18%)	0.00 (0.00%)	1.70 (100.00%)
복구형	3만불(A)	7.40 (27.31%)	0.40 (1.48%)	4.00 (14.76%)	5.90 (21.77%)	3.70 (13.65%)	1.50 (5.54%)	2.80 (10.33%)	0.60 (2.21%)	0.80 (2.95%)	27.10 (100.00%)
	1만8천불(B)	7.50 (29.18%)	0.50 (1.95%)	4.10 (15.95%)	6.00 (23.35%)	3.20 (12.45%)	1.30 (5.06%)	2.00 (7.78%)	0.40 (1.56%)	0.60 (2.33%)	25.70 (100.00%)
	A-B	-0.10 (-7.14%)	-0.10 (-7.14%)	-0.10 (-7.14%)	-0.20 (-14.29%)	0.60 (42.86%)	0.20 (14.29%)	0.80 (57.14%)	0.20 (14.29%)	0.20 (14.29%)	1.40 (100.00%)
대륙형	3만불(A)	9.20 (35.52%)	1.30 (5.02%)	2.30 (8.88%)	7.20 (27.80%)	2.50 (9.65%)	1.00 (3.86%)	1.90 (7.34%)	0.30 (1.16%)	0.40 (1.54%)	25.90 (100.00%)
	1만8천불(B)	7.70 (32.08%)	2.20 (9.17%)	2.80 (11.67%)	6.30 (26.25%)	2.10 (8.75%)	0.90 (3.75%)	1.60 (6.67%)	0.20 (0.83%)	0.30 (1.25%)	24.00 (100.00%)
	A-B	1.50 (78.95%)	-0.80 (-42.11%)	-0.50 (-26.32%)	0.90 (47.37%)	0.40 (21.05%)	0.10 (5.26%)	0.30 (15.79%)	0.00 (0.00%)	0.10 (5.26%)	1.90 (100.00%)
영미형	3만불(A)	4.50 (27.95%)	0.60 (3.73%)	1.60 (9.94%)	5.80 (36.02%)	1.90 (11.80%)	0.40 (2.48%)	0.50 (3.11%)	0.40 (2.48%)	0.30 (1.86%)	16.10 (100.00%)
	1만8천불(B)	4.30 (29.25%)	0.70 (4.76%)	1.40 (9.52%)	4.90 (33.33%)	1.20 (8.16%)	0.50 (3.40%)	1.00 (6.80%)	0.50 (3.40%)	0.30 (2.04%)	14.70 (100.00%)
	A-B	0.20 (14.29%)	-0.10 (-7.14%)	0.20 (14.29%)	0.90 (64.29%)	0.70 (50.00%)	-0.10 (-7.14%)	-0.50 (-35.71%)	0.00 (0.00%)	0.00 (0.00%)	1.40 (100.00%)

출처: 유근춘 외(2008).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9'의 <표 5-2>를 수정한 표임.
자료: OECD SOCX

능력관련 급여는 전체적으로 약한 증가 이상을 보이고, 기타는 아주 약한 감소로 현상유지 수준을 보인다. 유족과 실업은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영역과 복지국가 유형구분에 따라 소득증가에 따른 보건복지 재정지출 구조 변동의 경향을 살펴보겠다. 본고의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변동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 경향이 있는 경우>

- 가족은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고, 유족은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고 있다.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고부담-고복지와 저부담-저복지에서 경향성이 있는 경우>

- <고부담-고복지인 북구형>의 경우 보건, 노령 그리고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감소하고, 반면 실업, 적극적 노동정책은 증가하고 있다.

- <저부담-저복지인 영미형>의 경우 보건, 노령 그리고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증가하고, 반면 실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감소하고 있어 북구형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저복지인 영미형과 가장 고복지인 북구형 사이에 위치하면서 역시 <고부담-고복지인 대륙형>에서는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북구형과 같음)과 함께 노령과 보건(영미형과 같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감소하고 있다.

<시사점>

• 먼저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가족분야

의 지출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족분야의 지출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 사회적 위험과 관련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생산적 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 고부담-고복지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저부담-저복지국가인 영미형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 실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즉 고부담-고복지국가에서는 이들 분야에서 소득변화에 따른 증가가 있었고, 저부담-저복지국가에서는 이들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다. 이를 통해 고부담-고복지를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관련 복지분야의 지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북구형 시민주의의 기본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북구형의 시민주의에서 고복지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일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가장 적은 사람이 이전소득에 의지해 산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복지분야인 실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중요하다. 즉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이 안전망으로서 뒷받침해주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⁵⁾

이상에서 본고의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중

5) Goesta Esping-Anderse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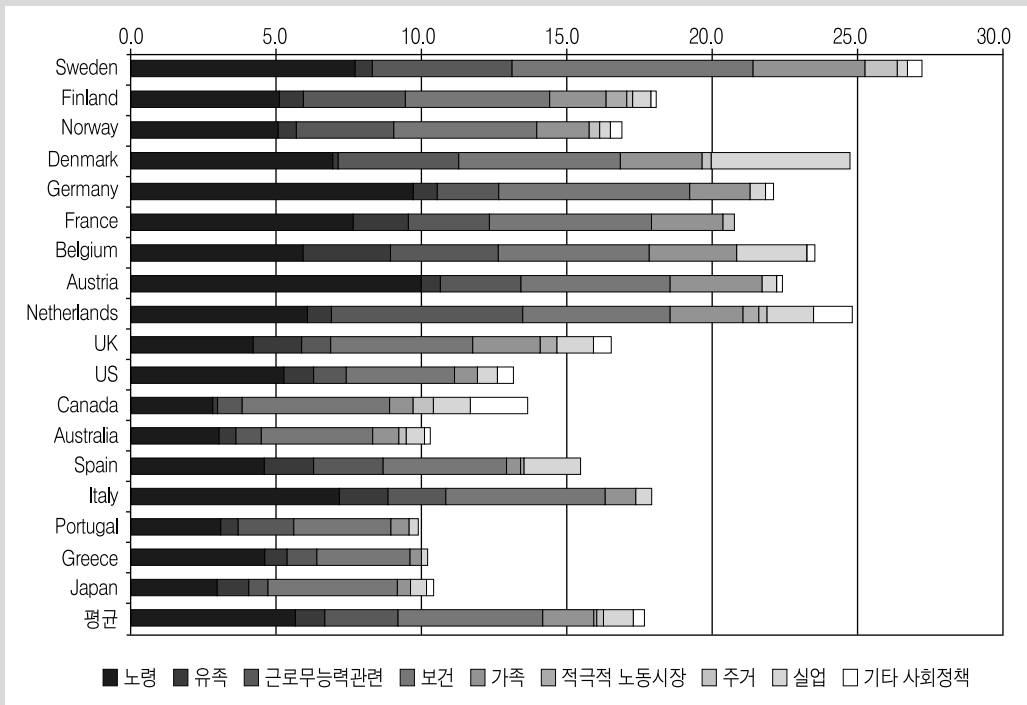
요한 사회지출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3. OECD SOCX 사회지출 영역의 통시적 변화와 복지국가 유형 간 비교: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합의

이상에서 생산적 복지가 고부담-고복지의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고, 그 핵심사항 중의 하나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출 종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출분야에 해당하는 것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실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실제로 OECD SOCX 사회지출의 통시적 변화를 복지국가 유형 별⁶⁾로 비교하여 이와 관련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도 록 하겠다.⁷⁾

그림 1. 사회보장지출의 구성의 비교: 1980년



출처: 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0.
자료: OECD SOCX

6) 북구형: 스웨덴 · 핀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대륙형: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 오스트리아 · 네덜란드, 영미형: 한국 · 미국 · 캐나다 · 오스트레일리아, 남유럽형: 스페인 · 이탈리아 · 포르투갈 · 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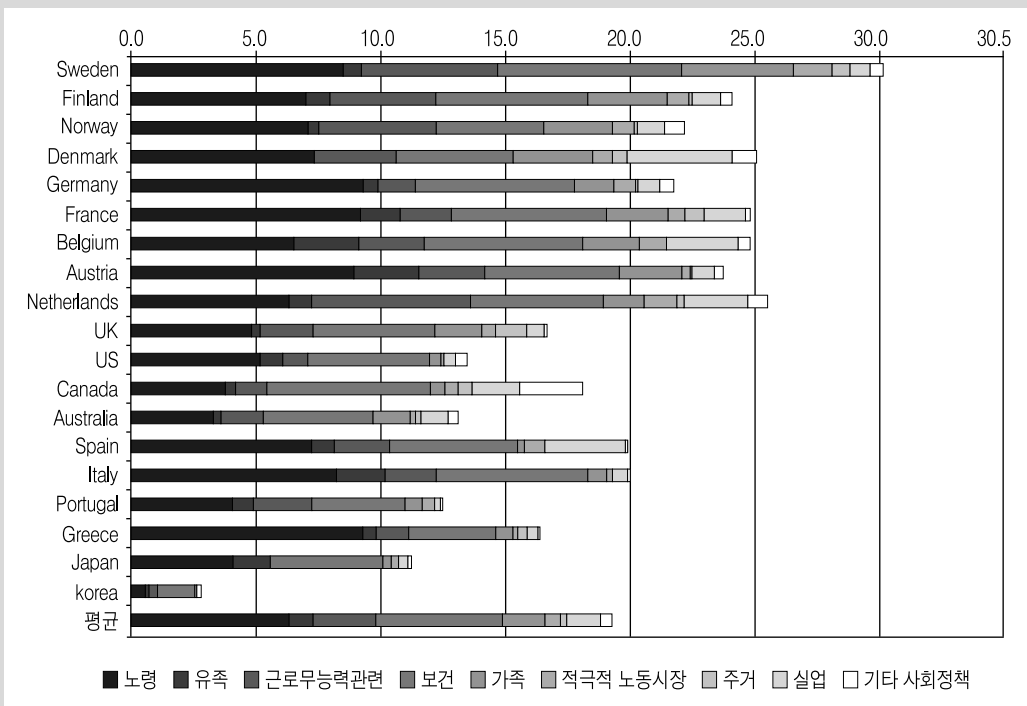
7) 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57~63.

1980년의 경우 <가족>의 경우는 고부담-고복지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평균보다 높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외에서는 영미형의 영국이 예외적으로 평균보다 가족지출이 높다. 이 시기에는 아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평균적으로 미미하고, 실업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가는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이고 스페인이 크지 않다. 실업도 평균보다 큰 국가가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인데 고부담-고복지에 관하여 생산적 복지가 중요하며,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지출의 종류가 있다

는 본고의주장과 관련하여 어떤 규칙성도 찾을 수 없다.

1990년을 보면 <가족>은 북구형과 대륙형에 있어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크고, 북구형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 외에는 영국과 호주의 가족이 평균근처이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이전시기보다는 더 커졌으나 평균적으로 아직 실업보다 작아 상기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고부담-고복지 국가들인 북구형(스웨덴이 가장 큼)과 대륙형(네덜란드가 가장 크고, 오스트리아만 평균보다 약간 작음)은 평균보다 큰 경향

그림 2. 사회복지지출의 구성의 비교: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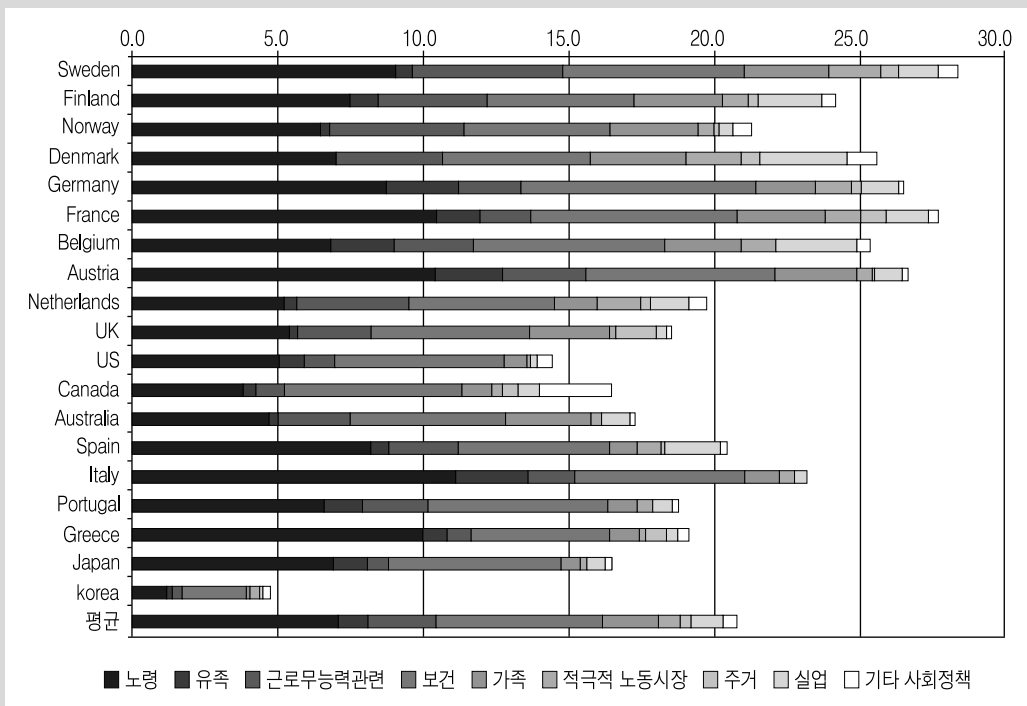


출처: 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1.
 자료: OECD SOCX

을 보이고 있다. 그 이외에는 스페인이 평균보다 크고, 영국과 캐나다는 평균 근처이다. <실업>은 고부담-고복지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가 크고, 다른 고부담-고복지 국가는 평균보다 크지 않다. 또한 저부담-저복지 국가들에서도 스페인, 영국, 캐나다가 높다. 이는 실업은 당시의 실업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정한 생산적 복지와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는 소위 황금삼각형 모형에서 후한 복지의 일환으로 실업급여가 높은 것은 가능하다.

2000년을 보면 <가족>의 경우는 고부담-고복지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네덜란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보다 높아 상기한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영국과 호주가 가족지출이 높다. 이는 이 국가들의 특수한 경향이라 판단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커져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고부담-고복지 국가 중에는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만 평균보다 약간 작고 모두 평균이상이다. 이도 상기한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외의 국가 중에서는 스페인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평

그림 3. 사회보장지출의 구성의 비교: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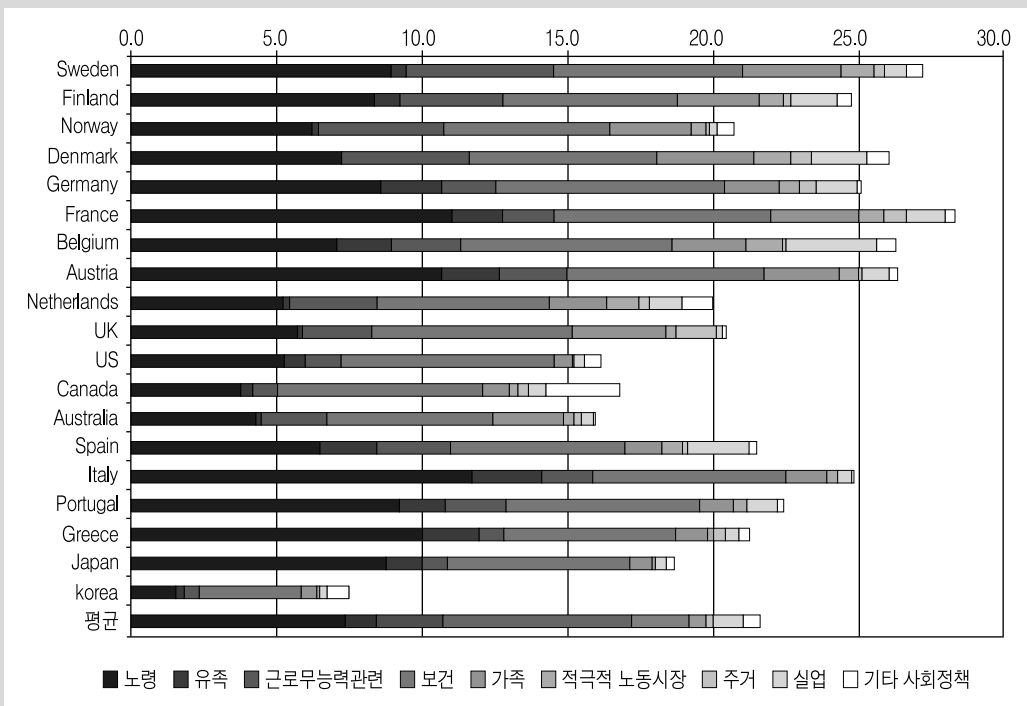
출처: 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2.
 자료: OECD SOCX

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도 스페인의 특수한 경향이라 판단된다. <실업>의 경우 고부담-고복지 국가 중에서 의미 있는 경우로 덴마크가 여전히 크고, 벨기에, 핀란드가 상대적으로 커졌고, 기타 고부담-고복지 국가에서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보다 커서 상기한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 국가 중에서는 스페인만이 실업이 평균보다 커서 이도 스페인만의 특수한 경향이라 판단된다. 특히 스페인은 1980년, 1990년에 이어 이리

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⁸⁾

2007년의 경우 2000년과 동일한 지출구조가 존재한다. 즉 고부담-고복지 국가들인 북구형과 대륙형(독일만이 평균보다 약간 작음)에서는 <가족>의 지출이 평균보다 높다. 그 이외의 국가 중에는 영국과 호주가 예외적으로 가족이 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평균적으로 더 커져 이전 보다 더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고부담-고복지 국가들인 북구형

그림 4. 사회복지지출의 구성의 비교: 2007년



출처: 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3.
 자료: OECD SOCX

8) 가능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실업이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계속 높거나, 아니면 실업에 관한 급여규정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관대한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과 대륙형 중에서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국가 중에는 스페인이 평균이상이다.<실업>의 경우에도 고부담-고복지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평균보다 큰 경향(스웨덴만 평균보다 약간 작음)을 보이고 있다. 2000년처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가 여전히 크다.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스페인만이 실업에서 평균보다 크다. 스페인은 계속해서 관찰기간 동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이 큰 국가라는 특수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부담-고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가 있고, 그의 가능한 경우로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출 분야가 있으며, 그 예로서 가족(여성일자리와 보육에 투자하는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교육과 재훈련), 실업 그리고 은퇴연기에 지출된 사회지출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는 고부담-고복지 국가에서 가족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데서 뒷받침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실업의 경우는 덴마크처럼 황금삼각형 모델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실시되는 경우 경제성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4. 사회지출과 국가경쟁력에 관한 회귀분석 연구

이상에서는 사회지출과 생산적 복지의 관계를 서술통계를 통해 규칙성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또한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나 고부담-고복지인 국가들의 배후에는 이미 경제적 경쟁력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었다는 제한점도 있다. 따라서 더 나아가 분석적이면서 경쟁력에 대한 명시적 취급을 하고 있는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겠다.⁹⁾

이명진, 양재진(2011)의 경우에는 경제적 경쟁력보다 더 넓은 의미의 국가경쟁력(IMD 국가경쟁력지수)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OECD SOCX의 사회지출의 분류에 근거한 사회지출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그 영향력의 유의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회지출의 총량은 국가경쟁력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가지지만, 위의 논의에서 살펴본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그리고 실업 등의 사회지출, 즉 가족과 고용복지지출로 구성된 사회투자지출은 국가경쟁력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위의 논의에서 발견한 규칙성과 전제한 가정이 실제와 부합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9)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다양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보이기보다는 본고의 논지에 부합하는 다음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이명진, 양재진(2011), 복지국가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pp.1~18; 정의룡, 임진영, 양재진(2012), 복지외 재정건전성의 관계분석: OECD 국가들의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3), pp.147~171; 양재진(2012), 한국복지국가의 발전 전략, mimeo.

표 3. 사회투자지출의 상세구분

사회투자지출 1	근로가정지원 현금급여 +사회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투자지출 2	사회서비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투자지출 3	근로가정지원 현금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투자지출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출처: 정의룡, 임진영, 양재진(2012). p.157; 양재진(2012). p.3.

표 4. 총사회지출과 사회투자지출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델_1	모델_2	모델_3	모델_4
독립 변수	전체사회지출	-0.391*** (0.000)	-0.166* (0.054)	-0.494*** (0.000)	-0.261*** (0.002)
	사회투자지출 1	0.691*** (0.000)			
	사회투자지출 2		0.382*** (0.000)		
	사회투자지출 3			0.756*** (0.000)	
	사회투자지출 4				0.530*** (0.000)
통제 변수	자본력(투자자본/GDP)	-0.122 (0.112)	-0.153* (0.072)	-0.140* (0.056)	-0.127 (0.113)
	인적자원(대졸/전체인구)	0.450*** (0.000)	0.391*** (0.001)	0.362*** (0.000)	0.503*** (0.000)
	소득수준(GNI, log)	-0.039 (0.676)	-0.147 (0.177)	0.111 (0.219)	-0.276*** (0.010)
	인프라(전력생산/인구)	0.239*** (0.001)	0.246*** (0.003)	0.417*** (0.000)	0.414*** (0.000)
	조세환경(법인세/조세수입)	0.036 (0.551)	0.113* (0.093)	-0.036 (0.547)	0.120* (0.057)
	연도	0.180** (0.001)	0.113*** (0.010)	0.196*** (0.000)	0.225*** (0.000)
N	183	183	183	183	
R ²	0.568	0.470	0.605	0.531	
수정R ²	0.546	0.442	0.585	0.507	
상수항	-666.6	-685.4	-658.4	-674.2	

p-value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자료: 이명진 양재진(2011)

출처: 양재진(2012). pp.3~4.

회귀분석을 통한 생산적 복지와 사회지출 간의 연구에 있어서는 OECD SOCX의 지출종류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하고, 분석기법을 OLS이외의 분석으로 넓히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5. 결론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회지출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지출의 증가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의 대표적 형식이 공짜점심에 관한 내용이다. 즉 직관적으로 세금에 근거한 사회이전을 증가시키면 삶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더라

도 최소한 GDP는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공짜점심의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사회지출의 종류에 따라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등 가족과 고용복지에 관련된 사회지출은 비록 전체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부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문
지